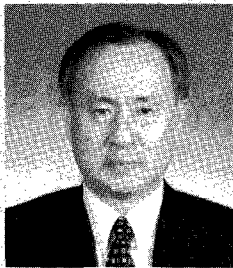


## 수입자유화 시대의 양계산물 유통개선 방향



유 철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경제연구부 수석연구원

**양**계산물의 유통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는 소규모 도계장의 난립과 도계시설의 낙후, 비위생적인 처리와 유통, 빈번한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심한 가격 변동시에 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소비자 가격안정과

도 관련하여 소비홍보의 부족문제 등이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왔다.

그러나 양계산물 유통 개선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비하여 적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양계산물 생산 농가수, 소비량, 생산액 등의 규모에 있어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계란 값이 폭락으로 모든 채란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데도 언론에서는 단지 단기적인 수급문제로 돌리지, 산지가격은 폭락하였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라는 등, 산지 소 가격이나 돼지가격 폭락때 비난의 표적이 유통업계인 점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만큼 양계산물 유통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반의 관심도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양계산물의 유통 문제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으며, 앞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업계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이 따른다면 양계산물의 유통개선 문제는 비육우나 양돈 부문보다도 쉽게 유통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가게될 것이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양계부문의 생산 및 가격안정화 뿐만 아니라 유통개선을 업계가 자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계열화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육계를 중심으로 10여 개의 민간 계열화업체와 축협이 계열화사업에 참여하여 계열화 사업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구적으로

닭고기 유통개선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이미 육계시장은 자유화 되었고, 수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육계수출 가능성은 인근 일본시장으로 닭고기의 수출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이제부터 양계산물의 유통문제는 시장 자유화 시대에 부합되도록 국내에 오래동안 고질화된 관행을 바로잡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와 규범을 투명하게 고쳐 나아가는 것이다.

즉 양계산물의 유통개선의 문제는 국산 닭고기가 수입 닭고기와 가격과 질에 있어서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나아가 닭고기 수출을 증대하는 등, 안정적인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지체없이 지원할 때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나아가야 할 유통개선의 과제를 몇 가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선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 생산·유통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일이다.

닭고기 유통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무엇보다도 닭고기의 신선도와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는 최근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주부들의 닭고기를 구입할 때 신선도에서 가장 불만을 느낀다고 대답한 주부가 조사대상 주부의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가격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한 주부는 조사대상 주부의 1%를 조금 넘을 정도였다.

닭고기 수입자유화로 앞으로 닭고기 가격이

수입자유화 이전처럼 큰 폭으로 변동하리라고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범위 안에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닭고기에 대한 지출 비중은 계속 낮아지게 되어, 소비자들이 닭고기 소비를 결정하는데는 가격보다는 신선도, 위생과 안전성과 같은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주부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구입하는 이유도 지금까지는 수입 닭고기보다는 국내산이 신선할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닭고기의 신선도 유지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닭 사육시 질병예방은 물론 질병 발생시 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휴약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도계, 수송, 냉장 보관중도 위해 물질이 묻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일도 닭고기에 위해물질의 잔류문제를 발생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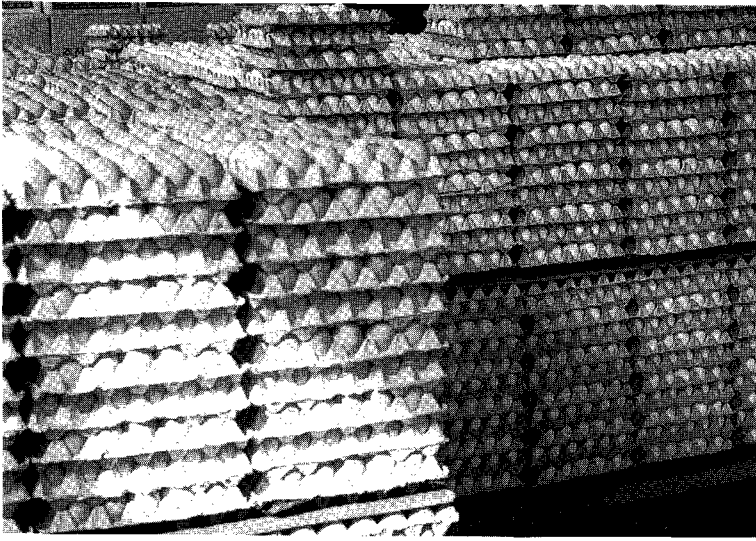
이상에서 지적한 닭고기 생산·유통에 신선도, 위생수준 유지 및 안정성유지는 국내 소비기반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닭고기의 수출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이다.

매년 일본은 우리 나라 닭고기 생산량의 거의 두 배를 수입하고 있고, 일본 검역당국은 수입 닭고기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위생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산 닭고기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국내산 닭고기의 수출이 부진하여 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문제가 개선되면 일본에 유리한 가격으로 우리 나라 닭고기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일본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되면, 돼지고기 일본 수출 확대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국내산 돼



지고기의 육질의 고급화, 위생 및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듯이, 닭고기의 경우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국내산 닭고기의 신선도와 위생, 안전성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국내산 닭고기 출하체중, 도계, 부분육 정형발골 등에 있어서 규격을 양계 선진국, 또는 수입국의 유통규격에 부합시켜 나아가는 일이다.

현재까지 국내산 닭고기 유통에 있어서 등급 및 유통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행에 따라 거래되고 있다.

그 결과 중량등급이 업체와 상인에 따라 달라 거래상 혼란과 소비자들에 불편을 주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부분육 유통이 일반화 되어 있고, 수입국에서 거래되는 일정 체중에서 도계되고 분할정형 발골된 부분육 만이 수출 할 수 있어 우리 나라 양계업계도 부분육 규격제정을 서둘러야 하겠다.

또 다른 시급하게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수출규격 닭고기를 도계할 수 있는 도계시설 설치 지원이다.

앞서 지적한 국산 닭고기의 신선 위생 안전성수준 문제에 못지 않게 일본수입업자들이 원하는 수출규격 도계시설은 전무하여, 앞으로 일본시장 본격 진출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희망업체에 대하여 수출전용 도계시설로 대체에

따른 자금지원 대책 수립이 급박한 실정이다.

셋째는 닭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수입육이 국내산 둔갑 판매를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

이미 우수 계열업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판매업체에 공급되는 물량에 대하여서는 개체 포장과 상표부착을 하기로 하는 등 둔갑방지 대책으로 서둘러 왔다.

이와 함께 외식업체에 대하여서는 원료육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토록 하기 위한 법개정도 필요하겠고 이에 따라 둔갑업소에 처벌 규정 강화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계란 유통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정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결과 산지계란가격은 계란의 수집물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집 반출상들에 의하여 산지가격이 결정되어 왔다.

가격 결정권은 상인에 있어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왔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수시로 변하는 계란가격 정보에 둔감하고 그저 빨리 생산된 계란을 처분하기만을 바라는 농가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상인들은 유리한 시점의 가격으로 계란가격을 정한다던가, 대금정산 당시가격으로 지불하는 소위 “후장기” 결재를 한다던가, 수개월 후 어음결제 등이다.

이에 대하여 농가들은 수집반출상들이 보복적인 계란수집거부로 입게될 피해를 우려,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여온 실정이다.

이러한 상인 주도 계란가격 형성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대한양계협회가 지역별 난가를 고시하여왔다.

이 위원회에서는 계란의 생산비의 변동과 계란 수급상황을 고려 고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을 대한양계협회에 통보하면 양계협회에서는 이를 전국 양계협회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이 가격은 부정기적으로 고시되어 왔으며, 그나마 구속력이 없어 하나의 참고가격에 불과하다.

이 고시가격은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 못하고 오히려 상인에 의하여 악용되기도 한다.

즉 상인이 농가로부터 계란을 구입할 때 이 가격이하로 계란을 구입한 후 판매상에게는 이 고시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외양상 고시가격에다 적정마진만 챙기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란 집하장을 중심으로 도매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왔으나, 기대하였던 성과는 못보고 있다.

**계란가격이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경매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도록  
공영 도매시장의 설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며  
이제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공영도매시장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기 앞서 일차적으로  
수도권에 계란공영 도매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급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계란 집하장에서는 농가에서 운반되어온 계란이 선별 세란 및 포장 후 이곳을 통해서만 수집반출상이나 중간도매상들이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정부의 지원하에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1996년 6월까지 전국 양계 축협이 운영하는 계란집하장은 13개 소로 연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오랫동안 상인 주도의 가격형성과 잘못된 거래관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최근 난가 고시제도 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더 지속될 수 없게 되어, 공정가격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계란가격이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경매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도

록 공영 도매시장의 설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으며 이제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공영도매시장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기 앞서 일차적으로 수도권에 계란공영 도매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급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정부의 양계산물 유통개선의 기본적인 유통개선 대책을 개괄하면 닭고기 유통에 있어서는 첫째, 도매시장 및 통합 물류센터 중심 도매단계 유통개혁, 국내 브랜드 직판장 및 외식 체인점 육성으로 소매유통을 개혁하고, 둘째, 유통 규격화·표준화 정착과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조기도입으로 위생계육 유통정착으로 고품질·안전 닭고기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셋째, 자조금 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로 닭고기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등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계란 유통에 있어서는 첫째, 산지 계란 집하장 중심의 계란 수집·유통체계확립, 둘째, 현재의 관행상 중량등급을 보완하여 제도화 하고 계란 품질등급 마련과 검사제도 도입, 셋째, 소비자 계란공판장 개 설을 통하여 공정거래 및 적정가격 결정기능 수행, 넷째, 계란의 직거래 수급조절을 담당할 유통 주체의 다각적 육성 등이다.

지난번 발표된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에 의하면 유통부문에는 2002년에 농업부문예산의 30%로 투융자를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이중 상당액이 양계산물의 유통개선에도 지원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계산물의 유통개선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크다. **양계**

## 양계 유통 전문

- 병아리 (산란계, 육용계)
- 중 추 (산란계, 중추농장 직영판매)
- 노 계 (산란계, 육용종계)



**대 립 유통**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1179번지  
전 화 : (0417) 574-4600/1

대 표 : 변 광 일

농 장 : (0417)582-3827  
팩 스 : (0417)572-5949